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단체들(*)

담 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지미 사무차장 (전화 02-522-7284)

제 목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안내

날 짜 2016. 4. 21. (총 2 쪽)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보 도 자 료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 모집, 5월 초 제기 예정

<http://phone.jinbo.net>

1.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3월 29일, 공동대응 단체들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1차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통신자료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4월 21일 개소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1호 소송이기도 합니다.

2.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은 이 자료들을 손쉽게 가져가는 데 비해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이나 목적에 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관에 왜 제공되었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3.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단체들은 4월 30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온라인 모집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5월 초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며 정보공개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공동대응 단체들은 통신자료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곧 개원할 20대 국회에서 대안적인 법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참여방법 : 온라인 <http://phone.jinbo.net/>
-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까지
- 참가비 : 없음
- 문의 : 이메일 infoprotect2016@gmail.com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참여해 주세요!

http://phone.jinbo.net



*** 년 통신내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외)			
상호	제공 일자	요청기관	요청사유
모바일	2015-12-28	서울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9533 (공문번호)
모바일	2015-12-21	경북지방경찰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2015-01830 (공문번호)

모집기간 : 2016년 4월 30일까지

문의 : infoprotect2016@gmail.co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월',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